

## 올 아파트 39만가구 공급

(2003. 1. 1)

올해 전국에서 새아파트 39만 2,017가구가 공급된다. 업체들이 지난해 내놓은 28만 5,230가구보다 37.4% 늘어난 규모다. 총 공급물량의 65.3%인 25만 6,207가구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된다. 규모별로는 20~30평대 아파트가 전체 80%에 달한다. 매일경제신문이 한국주택협회 소속 대형업체 92개사,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 소속 중소기업 198개사, 대한주택공사 등 291개 주택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2003년 주택공급계획」에 따르면 이중 사업계획이 마련된 100개 업체가 전국 16개 광역시·도에서 아파트를 내놓을 계획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5만 5,744가구 △인천 2만 3,162가구 △경기 17만 7,301가구 등 수도권에서 많은 물량이 나온다. 행정수도 이전지로 부각된 충청권에선 3만 782가구가 선보인다. 지난해 물량(2만 8,111가구)보다 10% 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개발 기대심리를 업고 분양 열기가 달아오를 가능성이 있다. 지방에서는 부산(3만 4,709가구) 경남(1만 7,899가구) 등 영남권 분양 물량이 많은 편이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수도권과 충청지역에서는 연초 계획된 물량 외에도 재건축·재개발지구나 택지개발지구에서 수시로 분양 물량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건산연, 건설경기 하강대책 찾아야

(2003. 1. 2)

건설경기 하락이 예상됨에 따라 건설업체들은 안정적인 일감 확보와 수익성 확보를 위해 틈새시장 발굴, 마케팅 혁신 등 새로운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매출액 20억원 이상 143개 건설사의 작년 상반기 영업실적과 상장업체 또는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건설업체 70개사의 작년 3·4분기까지 영업실적을 조사한 결과,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각각

5.0%, 7.2%를 기록해 2001년 같은 기간의 2.4%, 5.4%에 비해 2.6%포인트, 1.8%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1998년 이후 적자상태가 지속됐던 매출액 경상이익률은 작년에 흑자로 전환돼 각각 3.0%, 4.2%의 수익률을 기록했으며 영업이익을 통한 금융비용 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이자보상비율은 매출액 20억원 이상 143개사의 경우 184.2%를 기록, 2001년 49.3%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 부채비율도 각각 280.2%와 219.9%로 낮아져 200%에 진입했고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차입금 의존도는 32.0%와 28.3%를 기록, 제조업의 33.1%보다 낮게 나타났다. 건산연은 이처럼 건설기업의 영업실적 및 재무구조가 개선된 것은 주택을 중심으로 한 건설경기가 호조를 보이는데다 저금리 지속 등 경영환경이 좋아진 것과 더불어 부채상환과 경영효율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촉매역할을 했다고 분석했다. 건산연은 그러나 작년 하반기 정부의 주택경기 안정화 대책을 계기로 시작된 건설경기 위축이 금년 건설물량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건설업체들은 건설물량과 수익성 확보를 위해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하며 점진적인 사업구조 조정을 통해 환경변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산연은 이와 함께 재무구조와 영업실적의 전반적인 개선에도 불구하고 대형 업체와 중소기업, 우량업체와 비우량업체간 양극화 경향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 레미콘 등 건자재 시장,

수급 불균형 줄지만 가격은 오를 듯

(2003. 1. 3)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최윤기 박사가 연구한 「2003년도 주요 건자재별 수요 전망」을 살펴보면 지난해와 비교해 시멘트는 3.5%, 레미콘은 4.3%, 철근은 1.8%의 소폭 증가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중 레미콘은 1억 3,444만㎡를 출하해 외환위기 이전인 지난 1997년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업종별로는 올해 상반기에는 상가와 공동주택의 마

감공사가 활발해지면서 내·외장재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위생도기나 석고보드, 점토벽돌, 판유리 등의 공급부족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전자재 가격은 최근 해상 운송을 비롯한 물류난이 심화돼 수입 원자재 가격이 급증하는 추세에 있고 올해 전자재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지 않는 이상 전자재 가격 상승이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3년 건설인력은 연평균 3.7% 증가한 179만 6,000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건설현장 기능직 인력 노임은 건설업 기피 현상으로 인력난이 해소되지 못해 급격히 상승했다. 특히 50세 이상 고령층의 기능직 취업자수는 증가세를 보이는 반면 20~30대 젊은층의 감소세는 지속됐다. 이같은 현상은 2003년에도 어느 정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건설물량 감소세로 지난해 처럼 극심한 인력난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의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주택사업 부문의 종업원수는 정체되는 반면 마케팅 경쟁과 분양 경쟁은 더욱 치열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험이 풍부한 영업직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도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능직 인력은 2003년 평균 133만 2,000명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돼 건설업 전체 취업자의 74.2%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기능직 인력은 외환 위기 이전인 1997년의 90%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예측된다.

## 주택보급률 100% 돌파

(2003. 1. 7)

주택보급률이 지난해 100%를 돌파했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주택보급률은 100%를 초과했으며 수도권 주택보급률은 서울 83.8%, 경기 94.2% 등 평균 91.8%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7일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시도별 건설실적과 멸실률 등을 따져봐야 주택보급률 추정치가 나오겠지만 지난해 5대 신도시 건설 이후 가장 많은 65만 가구가 건설됐기 때문에 전국 평균 보급률은

100%를 넘었다”고 말했다. 공식 주택보급률은 통계청이 5년마다 조사한다. 주택보급률은 지난 1960년 84.2%에 달했으나 이후 경제성장에 따른 도시화와 인구 증가, 핵가족화에 따른 가구수 증가 등 요인으로 1970년 78.2%, 1975년 74.4%, 1980년 71.2%, 1985년 69.8%로 점점 떨어졌다. 그러나 80년대 후반부터 주택난을 획기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주택 200만가구 건설 계획이 발표되고 이에 따라 일산, 분당, 평촌, 산본, 중동 등 5대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1990년 72.4%로 상승세를 회복한 뒤 1995년 86%, 2000년 96.2%로 급상승했다. 건교부는 올해 계획대로 50만가구가 지어지면 연말 전국 주택보급률은 102.7%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연간 50만가구씩 지속적으로 건설할 경우 수도권 주택보급률은 2006년 100%, 전국 평균은 2007년 110%를 돌파하고 2012년에는 선진국 수준인 115%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 전주-광양 등 5개 고속도로

신설, 확장키로

(2003. 1. 13)

올해 전주-광양 고속도로와 동해고속도로 주문진-속초, 서울-춘천 고속도로, 서수원-평택 고속도로 등 4개 고속도로 공사가 신규 착수된다. 또 경북 고속도로 경주-언양을 4차로에서 6차로로 넓히는 공사도 시작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올해 고속도로 착수 및 개통계획을 13일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전주-광양 고속도로(118km)는 올 상반기 중 실시설계를 끝내고 용지보상에 착수, 오는 2010년 완공할 계획이다. 이 도로는 전남 광양만권과 전주권을 직접 연결하는 신설 노선으로 호남 내륙지역 개발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해고속도로 주문진-속초(51km)는 2001년 준공된 강릉-주문진을 연장하는 노선으로 설악권 관광수요 및 금강산 육로관광 추진 등에 따른 교통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건교부는 올해 하반기 사업에

착수, 오는 2008년 이를 완공할 예정이다. 한편 건교부는 경부고속도로 구미-동대구(61km)와 구마고속도로 금호-서대구(3km)는 오는 12월 개통되고 영동고속도로 호법-가남(15km)도 오는 9월 개통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북한 시멘트 부족, 발전소 건설에 영향 (2003. 1. 15)

북한의 시멘트 부족 현상이 최근 전역에서 일고 있는 중소형발전소 건설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입수된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평안북도 대관군에서는 시멘트 공급 부족으로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수력발전소의 건설 자재로 흙과 돌을 주로 이용하고 있다. 노동신문은 "흙과 돌로 언제(땀)를 쌓아도 물이 새거나 터져 나갈 우려가 없다는 기술적인 담보가 있다"면서 "언제 밑으로 물이 새지 않도록 기초를 진흙으로 다지고 있다"고 말했다. 신문은 "많은 흙과 돌을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수력발전소의 공사량은 방대하다"며 "그러나 흙과 돌을 이용해 귀중한 시멘트를 얼마 쓰지 않고도 언제를 튼튼히 쌓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올 공공택지 총 1,050만평 공급 (2003. 1. 17)

올해 수도권에서 화성 동탄, 용인 흥덕 등 65개 지구 570만평의 공공택지가 공급된다. 16일 건설교통부는 올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8만가구 등 모두 50만가구를 건설하기 위해 수도권 570만평 등 전국 172개 지구에서 공공택지 1,050만평(30만가구분)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올해 주택건설에 소요될 1,350만평(50만가구분)의 택지 가운데 78%를 차지하며 지난해 공공택지 공급실적 900만평에 비해 16% 늘어난 것이다. 수도권은 지난해 발표된 중기 택지수급계획 등에 따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지역 등 65개 지구에

서 570만평(18만가구분), 지방은 107개 지구에서 480만평(12만가구분)이 각각 공급된다. 일반 택지 개발지구에서 화성 동탄 104만평, 용인 흥덕 66만평, 남양주 진접 60만평, 화성 향남 51만평, 하남 풍산 30만평, 시흥 능곡 29만평, 김포 장기 27만평 등이 공급되고 부천 여월 20만평, 남양주 가운 15만평, 고양 행신 215만평, 성남 도촌 14만평, 의왕 청계 10만평, 광명 소하 10만평, 안산 신길 8만평 등 그린벨트 해제예정지에 조성되는 11개 국민임대단지에서 택지가 공급된다. 특히 수도권은 지난해 9·4주택시장안정대책에서 발표한대로 당초 오는 2004년에 공급할 예정인 파주 운정 34만평, 용인 구성 20만평, 인천 영종 37만평, 양주 고읍 24만평 등 4개 지구 115만평을 여유물량으로 확보, 지난해와 같은 주택시장 불안현상이 나타나면 올해 앞당겨 공급할 방침이다.

### 대법원, 레미콘 차주 근로자 아니다 (2003. 1. 20)

레미콘 운송차주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재운 대법관)는 레미콘 업체인 C사가 '레미콘 운송차주는 근로자가 아님을 확인해 달라'며 운송차주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같은 대법원의 판결로 이와 유사한 형태의 알력관계를 빚고 있는 레미콘업체들도 이를 계기로 운송차주와 새로운 관계정립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운송차주들이 회사의 지시에 따라 레미콘을 지정장소에 운송해야 하는 등 소속회사의 지휘와 감독을 받고 있지만 차량의 소유권을 갖고 사업소득세를 내는 만큼 종속적 고용관계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C사는 지난 2001년 1월 레미콘 운송차주들이 전국 건설운송노조 분회를 설립, 단체교섭을 요구하다 거절당한 뒤 단체행동에 돌입하자 같은해 7월 소송을

제기,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업체 관계자는 “이같은 판결이 일단 차주와 회사간 새로운 관계정립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업체별로 복지차원의 지원 방식 등이 달라 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 || 지난해 67만가구 건설, 94년 이후 최대 (2003. 2. 8)

90년대초 5대 신도시 건설 이후 가장 많은 주택이 지난 한해동안 지어졌다. 7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건설(사업승인 및 건축허가) 실적은 모두 66만 6,541가구로 2001년(52만 9,854가구)에 비해 25.8% 증가, 1994년 이후 최대 물량을 기록했다. 주택건설은 90년대초 5대 신도시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90~93년 58만~75만가구가 지어졌고 이후 60만가구 안팎을 유지했으나 외환위기로 1998년 31만가구로 떨어진 뒤 1999년 40만가구, 2000년 43만가구, 지난해 53만가구로 점차 회복세를 보여왔다. 지역별로 수도권이 37만 6,248가구로 23.6%, 지방이 29만 293가구로 28.8% 늘어난 가운데 서울(15만 9,767가구)이 37%, 광역시(14만 4,891가구)가 45.9% 각각 증가해 집값이 뛰었던 대도시를 중심으로 주택건설 경기가 호황을 보였음을 뒷받침했다. 아파트 건설이 38만 4,692가구로 35.8% 증가해 전체 물량의 57.7%를 차지했으며 연립, 단독 등 다른 주택은 7.4% 늘었고 민간부문이 54만 2,811가구로 35.1% 증가한 반면 공공부문은 12만 3,730가구로 3.3% 감소했다.

## || 수도권 신도시 2~3곳 올 상반기 선정 (2003. 2. 7)

행정수도 이전 일정이 지난 5일 발표됨에 따라 수도권 신도시 건설계획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초 올 연말께로 알려졌던 행정수도 예정지 선정이 내년 상반기로 늦춰짐에 따라 신도시 건설이 예정대

로 진행될지 아니면 행정수도와 연계해 일정이 미뤄질지 의견이 분분하다. 결론부터 말하면 수도권 신도시 건설은 예정대로 추진된다. 당초 정부가 발표한대로 올 상반기중 신도시 2~3곳 입지가 결정된다는 말이다. 단지 행정수도 이전계획에 따라 신도시 규모는 다소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6일 건설교통부는 “신정부 출범 후 다시 논의될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수도권 신도시 건설계획 일정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관계자도 “행정수도 이전일정은 정했지만 수도권 신도시의 시기조정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었다”면서 “다만 신도시 숫자나 규모는 신행정수도 건설계획과 연계해 조정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도시 건설에 대한 관심이 행정수도 이전계획과 맞물려 있는 것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난달 건설교통부 업무보고 때 “수도권 신도시 건설은 행정수도 이전계획과 연계해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 그렇지만 행정수도는 어차피 충청권에 건설될 것이나 후보지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더라도 신도시 입지를 정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는게 건교부와 인수위 시각이다. 또 행정수도가 어디로 결정되든 수도권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신도시 개발이 불가피하다는데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건교부는 이와 관련해 이미 후보지에 대한 검토를 마무리했으며 최종 입지결정을 위한 낙점만 남겨둔 상황이다.

## || 첨단형 콘크리트 개발 서둘러야 (2003. 2. 10)

레미콘산업의 점진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환경친화적이면서도 성능이 우수한 첨단 지식형 콘크리트의 개발과 함께 고부가가치 제품개발을 통한 생산성 향상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양대 신성우교수(건축학부)는 ‘21세기 지식산업으로서 레미콘산업의 발전방향 보고서’를 통해 “현재 레미콘 업계는 원재료의 수급과 출하단가, 첨단기술력 부족 문제가 대두되고 있지만 고부가가치 기술개발을 통

한 생산성 향상 등 점진적인 발전을 위한 전략이나 방안이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신교수는 앞으로 보통강도의 콘크리트(21MPa)는 물론 고성능(40MPa 이상)의 개발과 국제적인 성능설계요구에 맞는 콘크리트제품의 다양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고부가가치 제품의 개발과 함께 산업폐기물, 부산물을 활용한 에코콘크리트, 혼화재료·첨단재료를 이용한 미래형 고기능 콘크리트 개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시멘트업계와 건설업체, 학계 등 관련업계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상설위원회를 설립해 관련업계간 윈-윈(Win-Win) 전략을 수립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예상했다. 이와 함께 신교수는 콘크리트 분야의 기술동향과 관련, 고성능·스마트 재료, 환경친화적 재료, 리사이클 재료를 중심으로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정보화에 기반을 둔 구조설계의 전산화와 성능설계법 도입, 구조설계 및 내구성설계의 통합, 구조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보수보강기술개발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 건교부 올해 주택 50만가구 신설

(2003. 2. 22)

건설교통부는 21일 최근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주택건설종합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계획에서 서울 11만가구, 인천 4만가구, 경기 15만가구 등 수도권 30만가구와 지방에서 20만가구를 각각 건설키로 했다. 유형별로는 국민임대 8만가구와 공공임대 7만가구 등 임대주택 15만가구, 분양주택 35만가구 등이다. 이는 지난해 주택건설 실적 66만 7,000가구에 비해서는 다소 줄어든 것이지만 임대주택(8만 7,000가구)은 두배 가량 늘어난 수치다. 건교부는 50만가구 건설에 필요한 택지 1,350만평 가운데 수도권 570만평 등 1,050만평을 공공택지로 공급하고 주택자금 지원과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재정 6,426억원과 국민주택기금 9조 1,741억원 등 총 9조 8,167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아울러 앞으로 2~3년간 택지수요를 감안해 수도권 420만평을 포함해 올해 700만평의 택지지구를 지정해 향후 개발에 대비키로 했다. 서민 및 근로자에 대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지원규모도 지난해 1조원에서 1조 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금리도 주택규모별로 차등화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특히 올 상반기에 수도권 2~3개 자족형 신도시 후보지를 선정하고 판교 동측지역 140만평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등 현안사항도 계획대로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집값 안정을 위해 충청권 등 국지적 과열현상이 나타나는 지역에 대해서는 강력한 투기수요 억제책을 쓰기로 했다. 한편 건교부는 수도권에 매년 30만가구 이상을 건설, 오는 2006년 주택보급률을 100%로 끌어올리는 동시에 주택의 양적인 공급 확대와 질적 주거복지 개선 등 향후 10년간의 주택정책 방향을 담은 주택종합계획(2003~2012)도 수립하기로 했다.

### 한일, 토질안정처리재 특허 취득

(2003. 2. 24)

해안매립지나 항만, 연약지반 등 취약한 토양을 안정화시키는 시멘트계 토질안정처리재가 개발됐다. 한일시멘트는 고로슬래그와 집진더스트를 주원료로 활용한 연약지반의 토질안정처리재의 제조방법을 개발, 특허를 획득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특허는 해안매립지나 항만, 도로 등 연약지반과 토질의 안정화가 필요한 지반을 안정적으로 고화시키기 위해 고로슬래그와 시멘트 킬른 집진더스트, 무수석고 등을 포함한 기본조성물에 염화칼슘과 수산화나트륨 등을 배합, 고화가 어려운 장소에 효과적인 고결작용을 낼 수 있도록 고안됐다. 이와 관련, 한일시멘트는 토질에 포함된 유기물질로 인해 수화반응에 의한 고화재의 고결작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염화칼슘과 수산화나트륨 등 알칼리염을 활용했다고 밝혔다. 또한 집진더스트에 함유된 고알칼리 성분을 이용해 고화재의 강도를 획기적으로 증진시켰

다고 덧붙였다. 특히 고로슬래그를 주원료로 사용해 기존 보통포틀랜드시멘트나 석회계를 사용할 경우 나타나는 급격한 수화열에 의한 크랙발생을 방지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포졸란 반응에 의한 강도발현 효과도 얻을 수 있다는 평가다. 한일시멘트 관계자는 “슬래그를 주원료 사용한 것은 유해이온의 고화 와 환원성이 큰 값을 확보해 해수와 지하수의 환경에서 고화제의 내화확성이 유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분함유율이 높은 습지나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 등이 오염된 토양, 유기물이 함유된 토양, 도로건설시 연약지반 등 지반의 고결화가 필요한 곳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한일측은 전망했다.

## 탕산지동시멘트, 시멘트 합작벤처에

900만위안 투자

(2003. 2. 24)

탕산지동시멘트(唐山冀東水泥股份有限公司)는 사 이사회가 탕산 평룬 디스트릭트 홍치 시멘트 플랜트와 시멘트 합작벤처를 설립하기 위해 900만위안(미화 108만달러)을 투자하는 방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지동시멘트푸위(冀東水泥扶餘有限責任公司)로 명명될 이 합작벤처의 등록자본은 1,000만위안으로 탕산지동시멘트가 지분 90%를 보유하고 탕산 평룬 디스트릭트 홍치가 나머지 100만위안을 투자할 예정이다. 이 합작벤처의 총투자금은 8,000만위안에 달할 전망이다. 한편 탕산지동시멘트는 지난 1월 또 다른 시멘트 합작벤처인 텐진지동시멘트 설립을 위해 272만달러를 투자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며, 등록자본 362만달러 규모의 이 합작벤처 지분 75%를 보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성수기 건설현장 인력, 자재난

(2003. 3. 1)

본격적인 봄철 건설 성수기를 앞두고 전국 곳곳의

건설현장이 인력난과 자재난 등 이중고를 겪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전국 건설현장은 최근 들어 인력 부족으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인건비가 급등해 목수 등 전문 기능인력의 경우 10만원이던 일당이 15만원으로 50%나 오르고 현장 수요가 많은 석공은 18만원대로 급등했으며 잡부도 6만원에서 10만원대에 육박하도록 올랐지만 그나마 인력구하기가 쉽지 않다. 또 철근, 시멘트, 모래, 자갈 등 건설 자재가 턱없이 부족해 선급금을 주고도 확보하지 못해 공사에 차질이 빚어지는 등 수급대책이 요망된다. 특히 수해복구 공사가 많은 강릉 속초 삼척 등 영동지방의 경우 올 상반기에 철근 8만톤, 레미콘 560만m<sup>3</sup>, 아스콘 90만톤이 필요하지만 물량부족으로 철근의 경우 지난해 35만이던 톤당 가격에 4만~5만원의 웃돈을 주고도 제때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 레미콘가격도 8% 인상됐으나 모래, 자갈 부족으로 생산차질을 빚고 있다. 수의계약으로 수해복구 공사를 맡은 강원도의 A 건설업체의 경우 철근 20톤을 구하기 위해 선급금을 지급해 놓고도 아직 자재를 확보하지 못해 공사가 중단상태다. 이처럼 건자재 및 인력난이 심화되는 것은 지자체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개발 소규모 공사를 한꺼번에 조기 발주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는 “본격적인 건축 성수기를 앞두고 있어 겨울철에 중단됐던 공사가 무더기로 재개될 경우 건설현장의 인력난과 자재난은 더 심화 될 것”이라며 “건자재 공급확대 및 일부 건자재상의 물량 사재기 등을 차단하는 당국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페콘크리트로 시멘트 만든다

(2003. 3. 5)

한번 사용한 시멘트를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다. 리모델링 신소재 개발업체인 리폼시스템은 동의대 오상균 교수팀과 2년동안 산학공동 연구를 통해 페콘크리트를 이용한 재생시멘트를 개

발하는데 성공했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페콘크리트는 분리 과정을 거쳐 골재와 철근 일부만을 재활용 할 수 있었다. 현재 국내외 특허 출원중인 이 기술은 먼저 페콘크리트의 시멘트를 정밀한 분쇄과정을 통해 자갈·철근 등과 완전 분리시킨 후 시멘트 미분말을 고온(약 700℃)으로 가열 처리한 뒤 혼화재료를 첨가해 재생시멘트를 생산하는 방식이다. 이럴 경우 페콘크리트의 3분의1 정도를 재생시멘트로 만들 수 있다. 리폼시스템은 “재생시멘트의 강도를 측정할 결과 첨가하는 혼화재료의 양에 따라 일반시멘트보다 비슷하거나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시공 기준에서도 KS규격을 모두 통과하는 등 일반시멘트와의 품질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같은 양의 시멘트를 생산하는데 드는 비용이 일반시멘트의 절반에 불과하고, 일반시멘트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환경오염 물질인 이산화탄소(CO<sub>2</sub>)도 거의 방출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고 리폼시스템은 밝혔다. 리폼시스템은 양산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재생시멘트를 본격 생산할 계획이다.

### 주공, 21개 지구 745만평 택지개발 (2003. 3. 7)

수도권 13개 지구 1,583만 9,000m<sup>2</sup>(479만 9,000평)를 포함한 전국 21개 지구 2,461만 1,000m<sup>2</sup>(745만 7,000평)의 택지개발사업이 본격화 된다. 6일 대한주택공사에 따르면 아파트 건설용지의 확보를 위해 연내 전국 21개 택지지구의 개발계획을 마련해 승인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들 지구는 수도권 13개 지구 1,583만 9,000m<sup>2</sup>와 부산 등 지방소재 8개 지구 877만 2,000m<sup>2</sup>다. 수도권 지구는 남양주 가운 49만 7,000m<sup>2</sup>, 고양 행신(2) 74만 9,000m<sup>2</sup>, 의정부 녹양 30만 3,000m<sup>2</sup>, 파주 운정 469만 2,000m<sup>2</sup>, 광명 소하 99만 8,000m<sup>2</sup>, 성남 도촌 79만 9,000m<sup>2</sup>, 안산 신길 81만 2,000m<sup>2</sup>, 군포 부곡 47만m<sup>2</sup>, 의왕 청계 33만 9,000m<sup>2</sup>, 부천 여월 67만 1,000m<sup>2</sup>, 화성 태안(3) 111만 9,000m<sup>2</sup>, 오산 세교 325만 7,000m<sup>2</sup>, 용

인 서천 113만 3,000m<sup>2</sup> 등이다. 또 지방소재 지구는 부산 고촌 27만 3,000m<sup>2</sup>, 부산 내리 28만 9,000m<sup>2</sup>, 원주 무실(3) 52만 7,000m<sup>2</sup>, 대전 서남부 202만 3,000m<sup>2</sup>, 아산 배방 353만 8,000m<sup>2</sup>, 광주 진월 65만 9,000m<sup>2</sup>, 대구 율하(2) 102만 5,000m<sup>2</sup>, 울산 화봉(2) 43만 8,000m<sup>2</sup> 등이다. 이 가운데 남양주 가운, 고양 행신(2), 의정부 녹양, 성남 도촌, 안산 신길, 군포 부곡, 의왕 청계, 부천 여월, 광주 진월 등 9개 지구는 최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확정받은 지구다. 또 부산 고촌, 부산 내리, 대구 율하(2), 울산 화봉(2) 등 4개 지구는 그린벨트 해제가 추진중에 있다. 주공은 이들 14개 그린벨트내 택지지구에 대해서는 연내 실시계획승인까지 마무리, 내년초부터 대지조성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나머지 7개 지구의 경우에는 내년중 실시계획승인을 추진할 방침이다.

### 건교부, 고속도로 1,222km 건설키로 (2003. 3. 29)

정부는 올해부터 오는 2010년까지 1,200여km의 고속도로를 추가로 건설, 전국의 고속도로 연장구간을 4천km 수준으로 확충키로 했다. 김일중 건설교통부 차관보는 28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된 2003년 토목의 날 행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21세기 건설교통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먼저 국가 기간 교통·물류망의 확충을 위해 오는 2010년까지 1,222km 구간의 고속도로를 신규 건설, 전국 고속도로망을 현재의 2,778km에서 4,000km 수준으로 확충하고 2020년까지는 남북 7개축, 동서 9개축의 간선망을 건설한다. 이를 위해 올해에는 서울~춘천간, 서수원~오산~평택간, 전주~광양간, 주문진~속초간 등 4개 노선 271km를 신설하고 경주~언양간 28km 확장을 신규 착공하며 춘천~양양 등 6개 노선 411km 구간 및 신갈~호법 등 4개 노선 116km에 대한 시설계를 추진한다. 고속도로 외에 국도의 간선기능

회복을 위해서는 4차로 이상 국도비율을 2010년까지 50% 수준으로 높이고 올해에는 먼저 42개 구간, 318km를 완공·개통하며 교통이 혼잡한 도시지역에는 순환도로와 우회도로를 중점 건설한다.

## 한일, 부식방지용 시멘트 개발

(2003. 4. 2)

한일시멘트가 산에 의한 화학적 부식작용을 억제하는 내산 기능의 특수시멘트 몰탈을 개발했다. 이번에 개발한 제품은 노후화된 하수 시설을 효과적으로 복구할 수 있는 복구용 특수 몰탈로 하수관 복구 이후에도 시멘트 부식이 재발되지 않아 완벽한 보수가 가능하다는 것이 회사측 설명이다. 일반적으로 폐하수 관련시설 속에는 미생물의 증식으로 인해 각종 황산화합물을 발생시키는데 이것이 콘크리트를 부식시켜 수질오염 문제를 일으켜 왔다. 특히 기존의 하수 시설 복구용 제품은 내산 기능없이 일시적으로 보수하는 기능만 있었기 때문에 복구 후에도 부식이 재발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내산기능을 보유한 특수 시멘트 몰탈 개발로 하수관 부식의 재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환경부가 작년 하수관 정비 종합대책을 수립해 전국 하수관을 장기적으로 보수해 나가기로 했기 때문에 수요도 늘 것”이라고 기대했다.

## LG경제연구소, 올 성장률 3.8%로 급락할 것

(2003. 4. 3)

LG경제연구소는 3일 ‘경제 불안요인 점검과 2003년 경제전망’이란 연구보고서를 통해 금융시장 불안과 북핵문제 등 악재가 누적되고 있는 가운데 이라크전쟁도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경제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지난해 6.3%의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던 우리 경제가 올해는 3.8%의 저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민간소비와 설비투자의 부진이 두드러지면서 상반기에는 4.3%, 하반기에는

3.3%의 성장을 기록할 전망이다. 물가상승률은 4%대에 육박하고 경상수지는 10억달러 내외의 적자가 불가피할 것으로 연구원은 전망했다. 연구원은 우리 경제는 1·4분기를 고비로 침체양상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며 소비, 투자 등 수요부진으로 성장세가 급락하고 물가, 실업률 등 거시지표들이 악화되면서 경기조정 국면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경기하강 국면에 들어서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유가상승과 수출가격 하락 등 교역조건 악화를 반영하는 국민총소득(GNI) 증가율은 상반기 중 마이너스로 떨어져 체감경기는 2001년 경기침체기보다 더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원은 건설부문의 경우 지난해 부진에다 경기안정을 위한 정부의 조기 재정집행 노력 등으로 여타 부문에 비해 사정은 다소 나아질 것으로 보이나 부동산시장의 침체가 연중 계속될 것으로 보여 상반기 1.8%, 하반기 4.2% 연간으로는 3.1% 수준의 미약한 성장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원은 미-이라크전쟁, 북핵문제 등 대내외 불확실성과 경기전망 악화에 따른 기업들의 심리위축이 투자부진으로 이어지면서 기업들의 투자심리 회복이 지연될 경우 올해 설비투자는 상반기 -5.5%, 하반기 4.0% 등 연간 -0.9% 증가에 그쳐 지난 2001년에 이어 2년만에 다시 마이너스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민간소비도 극도로 위축된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인플레이션 압력은 낮지만 고유가와 원화약세에 따른 비용측면의 물가상승 압력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경상수지는 유가상승에 영향을 받아 상반기 6억달러 흑자, 하반기 18억달러 적자 등 올 한해 12억달러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실업률도 3.6% 수준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 올해 수도권 개별공장 83만 7,000평

허용기로

(2003. 4. 4)

올해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지역 개별공장

건축 허용면적이 276만 6,000m<sup>2</sup>(83만 7,000평)로 제한된다. 건설교통부는 수도권 공장총량제에 따라 최근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수도권 개별입지 공장의 총허용량을 지난해와 같은 276만 6,000m<sup>2</sup>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시·도별 배정 면적은 경기 267만 6,000m<sup>2</sup>(81만평), 서울 1만m<sup>2</sup>(3,000평), 인천 8만m<sup>2</sup>(2만 4,000평)이다. 공장총량제한 공장의 과도한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해 수도권에 허용되는 공장건축허가 면적을 매년 총량으로 제한하는 제도. 올해 허용량은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한 372만 4,000m<sup>2</sup>의 74%로, 행정수도 이전이 본격화되기 전까지 수도권 집중억제 기조를 유지하고 개별입지내 공장 수요를 공단이나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로 유도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수도권 공장 가운데 개별입지내 공장의 비중은 2000년 20.1%, 2001년 12.1%, 지난해 8.5% 등으로 급격히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공장총량은 제조시설과 사무실, 창고 등의 각종 바닥 합산 면적이 200m<sup>2</sup> 이상인 공장의 신·증축 및 용도변경 때 적용되며 총량이 소진되면 시·도지사는 모든 제조업 공장의 건축허가를 할 수 없게 된다. 한편 건교부는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해마다 할당했던 공장총량을 내년부터 3년단위로 바꿔 지자체장이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대신 송도·김포·영종도 등 경제특구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 기술표준원, 레미콘 KS규격 개정

(2003. 4. 14)

레미콘에 대한 KS규격이 개정돼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혼화재료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성 강화를 위해 저장도 규격을 폐지하고 고강도 규격을 신설, 건설현장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건설현장의 주요 건설자재인 레미콘 규격의 품질을 확보하고 수요패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레

미믹스트 콘크리트(KSF 4009) 규격을 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기술표준원은 이같은 규격 개정으로 인한 제조업계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규격의 적용시기를 2004년 4월 1일부터로 1년간 유예시켰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고로슬래그 미분말이나 플라이애시, 실리카 흙 등 혼화재료를 사실상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규격에서는 콘크리트에 사용되는 각종 혼화제와 혼화재 등 혼화재료는 콘크리트 및 강재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는 것 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다만 KS에서 규정하는 혼화재료는 KS에 적합한 것 이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로써 혼화재료를 일일이 명기해 새로운 혼화재료가 시장에 나타날 때마다 혼화재료의 추가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게 됐다. 또 혼화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구입자의 승인을 얻도록 해 제조업체가 임의대로 혼화재료를 사용함으로써 품질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레미콘 납품서의 지정사항에 플라이애시, 고로슬래그 미분말 등을 사용할 경우 그 종류 및 사용량을 기입하도록 했다. 표준원은 종전에는 KS규격으로 제정된 혼화재료들을 나열해 표현했으나 이번 개정에서는 혼화재료가 KS규격으로 규정된 경우에는 그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도록 표현방식을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기술표준원은 이와 함께 레미콘업계의 골재사용 확대 추세에 맞춰 레미콘에 사용하는 골재의 종류에 콘크리트용 동슬래그 골재(KSF 2543)와 콘크리트용 연슬래그 골재(KSF 2583)를 추가했다. 고강도 콘크리트의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건설현장의 상황을 반영, 호칭강도 16MPa의 콘크리트는 사용실적이 거의 없어 삭제했으며 45MPa와 50MPa를 새로이 규격품으로 지정했다. 또 호칭강도 35MPa와 40MPa의 경우 굵은골재 최대치수 20·25mm, 슬럼프 21cm도 콘크리트 종류에 추가했다. 국제단위 전환에 부응하기 위해 레미콘의 단위와 수치를 바꿔 kgf/cm<sup>2</sup> 등을 사용하지 않도록 했다. 슬럼프의 허용범위와 관련해서는 슬럼프 21cm일 경우 ±2.5cm로 수정했다.

## 정부, SOC분야에 재정 집중투자 (2003. 4. 18)

김진표 경제부총리는 올해 상반기중 정부재정을 조기집행하면서 경기진작 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집중투자하고 한편으로는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17일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미국 뉴욕에서 월가 투자자 등과 간담회를 개최, 신정부의 경제정책 및 우리경제의 현안에 대해 설명하면서 외국자본의 적극적인 한국투자를 당부했다. 간담회에서 김 부총리는 올해 상반기 중 재정을 조기집행하되 재정집행분을 경기진작 효과가 큰 SOC 및 중소기업·지방산업 활성화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연기금·공제조합 등의 민간투자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각종 관련제도 개선을 통해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또 단기적인 경기안정화 정책과 함께 중장기적 성장잠재력 배양에 경제정책의 중점을 둘 방침이라며 개혁정책의 기본노선을 유지하되 보다 시장친화적이고 예측가능한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밖에도 김 부총리는 집단소송제 도입 등 시장의 감시기능을 강화하면서 주식시장의 안정적인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증권시장 활성화대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중부내륙권 개발에 10조원 투입 (2003. 4. 21)

강원도 원주시와 횡성·영월군 등 중부내륙권을 개발하기 위해 내년부터 오는 2020년까지 모두 10조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강원도와 경북, 충북 등 3개 광역자치단체는 원주·횡성·영월을 포함한 충북, 경북 등 3개 광역권을 개발범위로 하는 '중부내륙권 광역개발 계획안'을 6월중 최종 확정하고 건설교통부에 국가계획으로 추진해줄 것을 공식 건의키로 했다고 강원도가 19일 밝혔다. 3개도 5개시 5개

군 10개읍 57개면을 대상으로 하는 중부내륙권 광역개발사업은 2020년까지 △산업기반확충, 관광개발부문, 교통시설 부문에서 9조 6,387억원(공공부문 7조 4,415억원, 민자 2조 1,972억원)을 투자해 78개 사업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15개 사업으로 추진되는 산업기반확충부문은 2,941억원, 관광개발부문은 20개 사업에 2조 131억원, 교통시설부문은 27개 사업에 6조 8,168억원이 투입되고 도시와 물류유통 등 16개 사업에도 5,147억원이 투자된다. 강원도 관계자는 "이미 정부와 대체적인 협의가 끝난 만큼 계획안이 최종 확정되면 사업추진에 별다른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신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 (2003. 4. 22)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 임기내에 신행정수도 건설 공사에 착수하고 이를 위해 연말까지 입지선정 기준 및 기본구상을 확정하며 후보지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천명했다. 정부는 특히 오는 2007년 하반기에 행정수도 건설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 올 상반기 중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을 마련하고 정기국회에 제출, 연말까지 제정기로 했다. 신행정수도건설기획단장인 권오규 청와대 정책수석은 21일 브리핑을 통해 "신행정수도 건설은 준비·계획·건설·이전 등 4단계로 나뉘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하고 "특히 입지선정과 도시의 규모·성격 등 기본구상은 다음달부터 전문연구기관 합동으로 연구용역에 착수하고 연구결과에 대한 여론수렴을 거쳐 금년말까지 입지선정기준 및 기본구상을 확정지를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 수석은 또 "우선 도상조사를 통해 충청권 전역을 대상으로 개발가능지를 물색한 후 오는 6월 하순께 현지조사에 착수하고 내년 중 최종 후보지를 확정하겠다"면서 "현지조사 및 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다음달 말까지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지자체 등으로 합동조사팀을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